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홍민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도경옥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CONTENTS

제9권 1호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인 쇄 2014년 9월

발 행 2014년 9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전 화 (대표) 02-900-4300

(직통) 02-901-2528

(팩스) 02-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전화 02- 786-2999

<비매품>



| 국제사회 동향

- 1. 개별국가 3
- 2. 유엔과 국제협력 7
- 3. NGO 및 기타 9
- 4. 분석 및 평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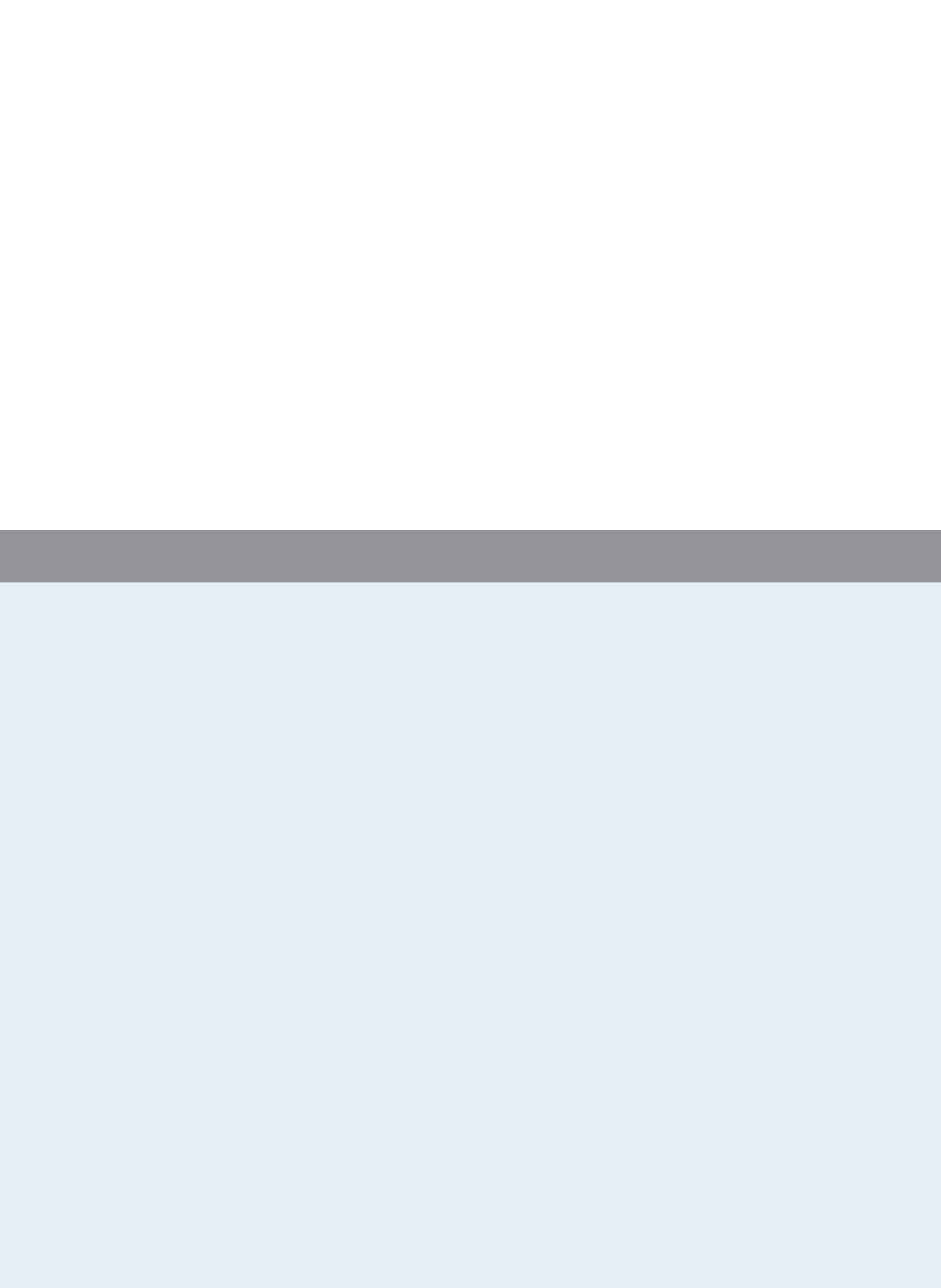
| 북한의 대응

- 1. 미국에 대한 반응 17
- 2. 일본에 대한 반응 21
-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24
- 4. 남한에 대한 반응 28
- 5. 분석 및 평가 32



| 인도주의 사안

- 1. 탈북민 37
- 2. 납북자 50
- 3. 국군포로 62
- 4. 이산가족 63
- 5. 분석 및 평가 68





1. 개별국가	3
2. 유엔과 국제협력	7
3. NGO 및 기타	9
4. 분석 및 평가	12

1. 개별국가

가. 미국

미국 국무부, '2014 국제마약통제전략 보고서' 발간

- 미국 국무부는 '2014 국제마약통제전략(INCRS) 보고서'에서 북한 국경지대에서의 마약 성행을 지적하고, 최근 몇 년간의 증가 추세를 설명(3.14)
 - 보편적 사용 마약은 필로폰으로, 북한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 여성과 젊은 층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 광범위하게 확산
 - 지난 2000년대 초까지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거나 불법 수출되기도 했던 양귀비 재배는 최근 급격히 감소하거나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
 - 다만, 북한 당국이 필로폰 등 불법 마약의 생산이나 거래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충분치 않다고 전제

미국 하원, 북한인권 청문회 개최

- 미국 하원은 3월과 6월에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 개최(3.26, 6.18)
 - 3월 26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 폭정에 대한 충격적 진실(The Shocking Truth about North Korean Tyranny)'이라는 주제로 청문회 개최
 - 6월 18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세계보건·국제인권·국제기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frica, Global Health, Global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도에 반한 죄(Human Rights Abus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라는 주제로 청문회 개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2014 종교자유 보고서' 발간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2014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할 것을 13년 연속 권고(4.30)

- 수천 명의 신양인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수용소에 보내져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조직적이고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복송 정책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

미국 국무부, ‘201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발간

- 미국 국무부는 ‘2014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는 3등급(Tier 3) 국가로 재지정(6.20)
 - 북한을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 공급국(source country)으로 지칭
 - 중국으로 불법 입국한 북한 여성이 직면하는 강제적 결혼, 노동, 매춘 및 러시아, 중국, 몽골,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북한 노동자 강제 노역 및 월급 착복을 지적

나.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

영국 의회,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

-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는 휴고 스와이어(Hugo Swire) 영국 외무부 국무상 등 외무부 관리와 영국의 대북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립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이하 “COI”)를 주요 의제로 토론회 개최(1.23)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COI 활동 지지 표명

-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유럽연합이 유엔 인권 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야 하며, COI 활동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2.10)

중국 정부, 탈북민 난민 불인정

- 중국은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이하 “UPR”)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 보고서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권고를 거부한다고 밝히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탈북민들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3.7)
 - 중국은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에 따라 탈북민 문제를 적절히 다루고 있다고 설명
 -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COI 설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

영국 외무부, ‘2013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 발간

- 영국 외무부는 ‘2013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조직적이고 만연한 인권 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4.10)
 -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인권 개선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 권리에서 미미한 개선이 있었으나, 언론의 자유 등 주민의 기본권이 여전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

스웨덴 외무부, 인권보고서 발표

- 스웨덴 외무부는 4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지적(5.28)
 - 외무부의 만스 몰랜더(Måns Molander) 인권담당국장은 COI의 구성 및 조사활동으로 스웨덴 정부도 북한의 정보 통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느 해보다도 정확하고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북한인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강조

다. 한국

각 정당, 북한인권법 관련 의견 표명

-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은 각각 북한인권법에 대한 본격적 검토를 거론(1.8~14)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해에는 절대 다수 국민의 염원인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입기자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이제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도 거론할 시점”이라고 언급
 -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
 -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인권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지적

인권위, 북한인권법 주무기관 인권위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인권법과 민생법으로 분리하고 각각 인권위와 통일부를 주무기관으로 해 조속히 입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강조(3.25)
 - 인권위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인권위의 업무이며, 인권위가 북한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

외교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유치의사 전달

-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field-based structure)의 국내 유치 문제에 대해 “정부는 북한인권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유치할 용의가 있고, 그런 의사가 있다는 점을 유엔에 전달했다”고 설명(4.10)

새정치민주연합, ‘북한인권증진법안’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북한인권법 태스크포스(TF)는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발의(4.28)
 - 북한인권 증진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
 -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할 것을 규정

-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대사 신설 등은 법안에 불포함

박근혜 대통령,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 환영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COI 위원장을 접견(5.30)
 - COI 보고서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획기적이고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으며, 통일연구원에서 한국어 번역을 하고 있음을 전달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 설치에 동의했다고 설명

2. 유엔과 국제협력

COI, 최종 보고서 발표

- COI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져 왔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2.17)
 -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을 져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C”) 회부 또는 특별재판소 설립, 유엔 인권최고 대표사무소(이하 “OHCHR”) 내 후속조치 이행 조직 설치 등을 권고
 - 그 밖에 중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민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 시행 등을 촉구

COI, 조사결과 최종 보고

-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은 COI 조사결과를 최종 보고하며 국제사회가 즉각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3.17)

- 북한이 이번 보고서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커비 위원장은 “살인, 고문, 낙태, 성폭행 등을 당한 수백 명 증인의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라”면서 “인터넷에도 올라와있는 이 보고서를 북한 주민은 접근조차 못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나”면서 일축
- 중국에도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보호 제공을 강조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책임감을 요구하고, ICC 회부를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25차 회기에서 COI 최종 보고서상의 결론 및 권고사항 대부분을 반영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3,28)
 - 유럽연합, 일본 등 서방측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찬성 30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채택되었으며, 반대는 중국, 쿠바,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6개국
 - 결의안은 북한에 대하여 자국 내 인권 침해 상황을 인정하고 모든 인권 침해를 중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또한, 결의안은 유엔 총회에 대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사태를 ‘적절한 국제형사메커니즘(appropriat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mechanism)’에 회부하는 방안 등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COI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 비공식 회의 개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3국 대표의 제안으로 ‘아리아 방식(Arria-Formula)’의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4,17)
 -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가운데 적어도 9개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데 찬성
 - 나머지 6개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 그 외 2개국은 추가논의 입장, 나머지 2개국은 유보 입장

유엔, 북한인권 UPR 보고서 확정

- 유엔 인권이사회는 실무회의 내용을 기초로 총 268개 권고를 수록한 북한에 대한 UPR 보고서를 확정(5.6)
 - 보고서는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12년 무상의무교육 시행, 영아 사망률 감소 및 이산가족 상봉 허용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한편, COI 권고안 수용, 납치자 문제 해결 및 이산가족 재결합, 정치범수용소 폐쇄 및 정치범 석방, 표현의 자유 허용 등을 촉구
 - 북한은 268개 권고 중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인도에 반한 죄가 자행된 사실의 인정, 성분제 폐지 등 83개 권고는 수용을 거부하고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 185개 권고에 대해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 이전에 답변하겠다고 응답

유엔 OHCHR,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 발표

- 라비나 샴다사니(Ravina Shamdasani) 유엔 OHCHR 대변인은 한국에 북한인권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공식 발표(5.30)
 - 대변인은 한국 사무소가 5~6명의 유엔 직원을 둘 예정이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직접적 피해자들이 많다는 이점을 통해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실을 감시·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3. NGO 및 기타

휴먼라이츠워치, '2014 세계 인권 보고서' 발간

-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14 세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1.21)
 - 보고서는 강화된 국경통제, 수감시설 내 인권침해 및 성폭력, 과도한 사형집행, 비참한 상황의 정치범수용소, 이동의 자유 제한, TV 등 정보 매체 통제 등을 언급

프리덤하우스, '2014 세계 자유 보고서' 발간

-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2014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 국가 10개 가운데 하나로 선정(1.23)
 - 보고서는 최고 1점에서 최하 7점을 기준으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환산한 결과, 북한은 모두 가장 낮은 점수인 7점을 받았다고 설명

국경 없는 기자회, '2014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 발표

-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2014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18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북한을 에리트리아에 이어 최악의 언론탄압 국가로 지목(2.11)
 - 김정은 정권 들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 휴대전화 공급이나 AP통신 평양지국 개설 등 일부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정보 유입 혹은 유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

러시아 북한 노동자 현황

- 코트라(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은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 파견된 2만 명 이상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임시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4.8)
 - 러시아 이민국 자료를 인용해 2013년 기준으로 2만 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에 파견돼 일하고 있으며, 이 중 25퍼센트 이상은 극동 연해주에 체류중이고 아무르주에도 1,500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가 있다고 지적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하며 북한 당국이 최근 러시아에 파견할 노동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파견 노동자 종사 업종이 과거에는 주로 벌목공이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건축일꾼, 여성 봉제공, 연해주 지방의 농사일꾼 등으로 매우 다양해졌다고 보도(4.18)

북한자유주간 행사

- 북한인권단체들이 주최하는 제11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국내에서 개최(4.28~5.4)
 - 행사 기간에는 북한인권 사진·그림 전시회, 탈북민 강제복송 중단 서명운동, 대북 전단 살포, 콘서트 등의 다양한 행사 진행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고문 방지 캠페인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고문방지협약 3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고문 방지 캠페인을 시작(5.13)
 - 북한과 중국을 고문이 만연한 대표적인 나라로 지목했으며, 북한의 '잔인한 강제수용소'를 언급하며 고문의 일상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
 - 특히 어린이 등 수감자들이 규율을 위반할 경우 극도로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고 있으며 매우 가혹한 고문들이 처벌에 동원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를 인권 침해의 주요 가해기관으로 지목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정치범수용소 위성사진 관찰 보고서 발표

-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1년여에 걸쳐 함경북도 청진의 25호 정치범수용소 위성사진을 관찰한 보고서를 발표(6.5)
 - 정보분석업체 올소스 어널리시스(All Source Analysis)와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함경북도 청진의 25호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강제노역으로 인한 생산물이 인근 마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
 - 수용소와 외곽 인근 마을을 잇는 철골천 600미터 구간에 다리가 3개나 있으며, 아주 잘 관리되어 있고, 강 주변에 축대 쌓기나 토지 고르기 등 활발한 건설활동이 있으므로 25호 정치범수용소가 이 지역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분석

엔케이워치, 북한인권 사진전 개최

- 엔케이워치(NK WATCH)는 한국전쟁 64주년을 기념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사진전을 개최(6.24~26)

- 사진전에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인권 관련 사진 50여 점이 전시됐고, 북한인권 포토존을 설치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도에 반한 죄 및 인권 침해 실태를 재연하는 퍼포먼스도 진행

4. 분석 및 평가

COI 보고서 이후 국제사회의 다양한 후속조치 예상

- 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 내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당국 및 기관의 책임성 규명이 활발히 논의
- ICC 회부, 특별재판소 설립 등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국제형사메커니즘의 적용 논의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개별 국가, 시민 사회, NGO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과 대화의 상호작용 증가

- COI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전략은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 정치범수용소, 성분 제도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압박의 효과가 강조되고, 식량권 등 사회적·경제적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및 남북대화 확대 등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강조
 -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UPR 등 북한이 참여하는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되, 동시에 명백한 국제형사법상 책임에 대해 명시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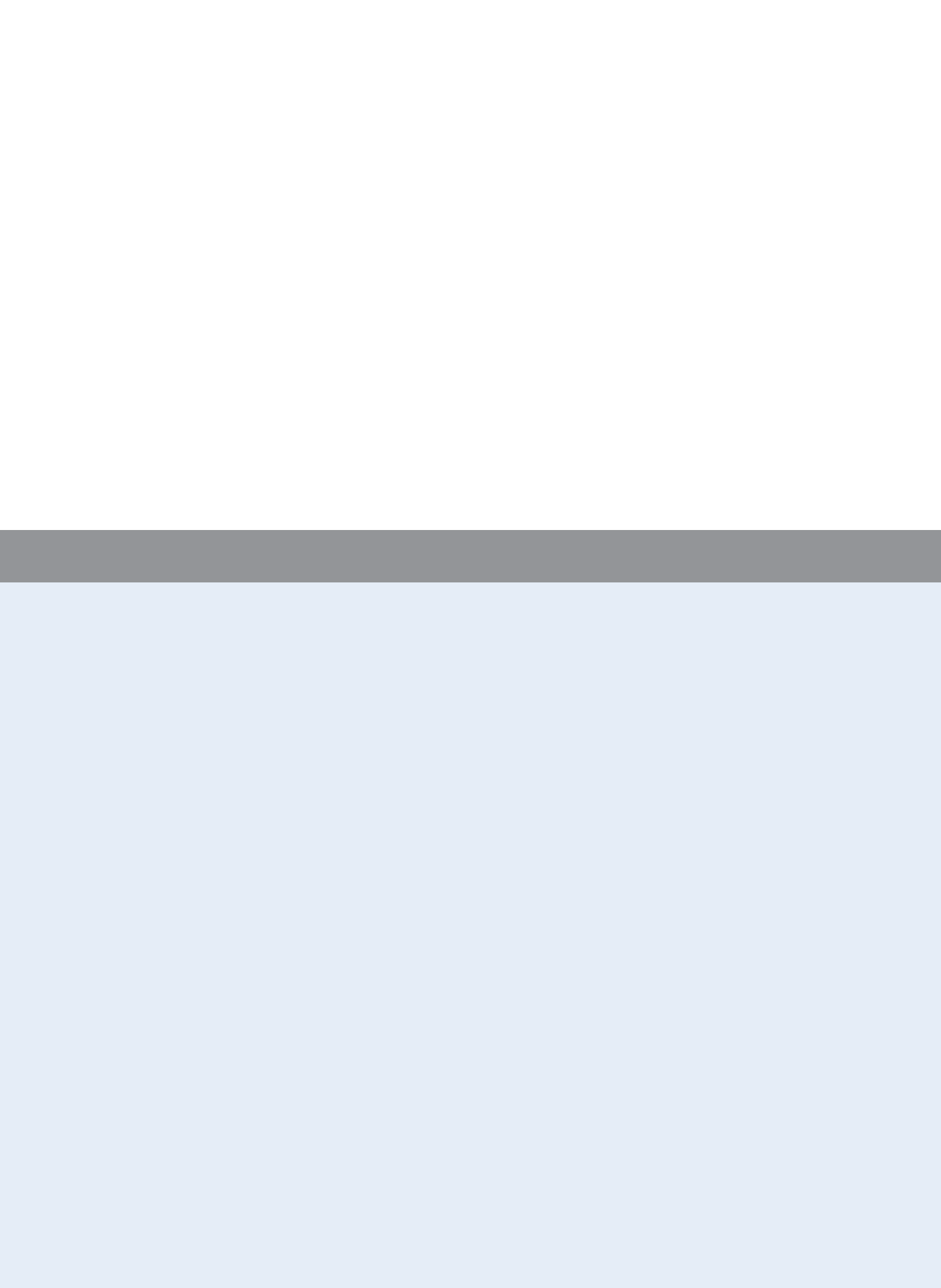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지속

- 북한인권법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와 그에 따른 북한인권법 통과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은 지속, 강화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과 성과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한국사회 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국제사회의 체계적 북한인권 정보조사 요구 확대

- 북한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에 개별국가, NGO,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북한인권 자료에 대한 체계화의 필요성이 대두
- 북한인권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각 기관별로 축적된 북한인권 정보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합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





1. 미국에 대한 반응	17
2. 일본에 대한 반응	21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24
4. 남한에 대한 반응	28
5. 분석 및 평가	32

1. 미국에 대한 반응

미국 국무부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대한 비난 대응

- 2014년 2월 27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인권 상황을 최악의 상태라고 평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자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
 - “100% 날조”라며, 미국은 정치·경제·사회(선거제도, 빈부격차, 범죄, 인종차별 등) 등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 인권동토대”이면서 “인권재판관 행세”를 한다고 비난(3.4, 조선중앙통신)
 - 미국이 “있지도 않은 인권 문제를 여론화, 국제화하여 주권국가들을 압살”하려고 한다며 비난(3.7, 조선중앙통신/ 3.8, 노동신문)
 - 남한에 대한 군사적 강점과 주한미군 범죄행위, 반복 적대시정책 실시 폐해 등을 거론(3.10,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보고서가 “저들의 인권허물을 가리우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을 일삼기 위한 기만극”이라고 비난(3.20,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
 - 중국, 이란, 이집트, 알제리 등 많은 국가가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반발하고 있다며 “부당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비난(3.23, 노동신문)
 - 미국의 무인기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및 외국 정상들 도청 등 “인권유린 행위”를 비난(6.29, 평양방송)

미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 미국의 총기류 범죄를 부패한 사회제도가 낳은 산물이라고 지적하며 “누구의 인권 문제를 사비하기 전에 저들 내부의 인권문제에나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3.17, 평양방송)
-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이 다른 나라의 모든 전화통화 내용을 한 달간 녹음해서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도한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를 인용한 후 “미국의 비열한 정탐행위는 인권유린과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며 미국이 ‘악의 나라, 인권유린의 왕초’라고 비난(4.14, 조선중앙통신)

- 최근 미국의 공민권법제정 50주년 기념에 대해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국, 인간생존권의 동토대”라며 ‘인종차별, 실업·빈궁자·총기류범죄 증가’ 등을 거론(4.30, 조선중앙통신)
-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의 일환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난(5.27, 노동신문)
 - 미국 중앙정보국이 수감자를 잔혹하게 고문했다는 최근 워싱턴포스트 보도와 판타나모 해군기지 수용소 인권침해 사례, 총기사건 등을 거론

미국 관료들의 북한인권 비판에 반발

- 북한을 ‘악의 소굴’이라고 비판한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발언을 규탄하며 “세계도처에서 피비린내 나는 인간살육만행을 감행하고 있는 인권의 불모지인 제 나라 미국에 대해서는 무엇이냐고 할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비난(3.1, 조선중앙통신)
-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지목해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3.24)
- 성 김(Sung Kim) 주한 미국대사의 북한인권 비판에 반발
 - 김 대사 재직 동안 “미군의 폭행사건, 제3국의 공식문서까지 위조한 간첩조작사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범죄들”이 발생했다고 비난(3.17, 조선중앙통신)
 - ‘공화국에 대한 비열한 중상모독이며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노린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고 주장(3.21, 평양방송)

북한 선거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반발

-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언급’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남의 선거에 주제넘은 시비”라고 비난(3.13, 조선중앙통신)

- “선거문제를 걸고드는 미국의 비열한 대북 ‘인권 공세’는 우리 인민의 반미감정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고 주장(3.27,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COI 보고서 관련 미국 비난

-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회기에서 COI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은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
 - 북한은 “이것은 명백히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현의 새로운 침략방식으로 서의 ‘인권’ 소동이며 현대판 전쟁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3.25, 조선중앙통신)
-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COI의 인도에 반한 죄 조사는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북한의 평판과 관계를 훼손했다고 지적(3.25)
- 북한 조국통일연구원은 ‘대화과 평화파괴의 원흉 미국을 단죄한다’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통해 COI 보고서와 북한을 ‘악(惡)’으로 표현한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 등을 열거하며 미국이 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적대행위를 한다고 비난(3.27)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불만 표출

-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유엔 본부에서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미사일과 인권 문제로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4.4)
 -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도발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언급하고 로버트 킹(Robert King)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목하며 “킹 특사의 북한 방문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발언

‘미국의 인권범죄 비망록’ 발표

- 북한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명의로 ‘미국의 인권범죄 비망록’을 발표(5.5, 조선중앙통신)

- “미국이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를 만천하에 폭로, 단죄” 하기 위해 비망록을 발표했다고 주장
- “미국이 그 무슨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와 양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판

유엔에 미국의 인권유린행위 주장 자료 등재 요청

- 북한 유엔대표부는 미국의 인권범죄비망록 ‘미국이 조선민족에게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범죄를 폭로, 단죄한다’를 회원국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유엔 공식문서로 등재해달라고 요청(6.3, 조선중앙통신)
 - 이에 따라 6월 2일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A/68/869-S/2014/321)으로 배포
 - 제안서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비방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와 다를 게 없다면서 미국이야말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

억류 미국인 정치적 활용

- 2014년 4월 29일 관광객으로 북한에 온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포울(Jeffrey Edward Fowle) 씨를 억류 및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6.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당국은 조사를 거쳐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관광객 매튜 밀러(Matthew Miller) 씨와 제프리 에드워드 포울 씨의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되어 재판에 기소 준비 중이라고 설명(6.30, 조선중앙통신)
 - * 2012년 11월 체포되어 2013년 4월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케네스 배(Kenneth Bae, 한국명: 배준호)에 이어 2014년 4월과 6월 매튜 토드 밀러, 제프리 에드워드 포울의 체포로 현재 북한 억류 미국인은 3명으로 확인

2. 일본에 대한 반응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판

-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며 과거청산을 촉구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신사 참배 정당화 발언에 대해 “군국주의 광신자의 도전적인 망발”이라고 비난하며 “일본반동들은 패망한 일제의 쓰라린 교훈을 잊지 말고 군국주의적 망동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고 강조(2.4,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 아베 총리는 2014년 1월 22일 다보스포럼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에게 명복을 빈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였다”고 발언
 -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를 두둔하는 일본 정객들의 발언에 대해 “일본의 고위 정객들의 잡소리는 국제사회의 우롱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라고 조언(2.24, 조선중앙통신)
 -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는 국회에서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은 응당한 것이다”라고 발언
 - * 혼다 에쓰로(本田悦朗) 일본 내각관방 참여는 미국 보도진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수상이 참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지위가 약화될 것이다”라고 주장
 - 2014년 4월 22일 일본 총무상 및 국회의원 146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일제의 침략범죄를 전면부정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 사상을 심어 그들을 해외침략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것”이라며 비판(5.2, 조선중앙통신/ 5.4, 조선중앙방송/ 5.5,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 정객들의 “세계 평화를 희망하기 때문에 참배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사적 행위가 정정당당하다는 황당한 궤변”이라고 비난하며 과거청산 촉구(5.7,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위안부 문제 비판 및 책임 촉구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

- 충분한 사과와 보상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에 또다시 칼질을 해대는 것과 같은 야만적인 처사”라고 비난하며 ‘과거청산 용단’ 지속 촉구(2.5, 조선중앙통신·민주조선)
 - 일본의 “강제연행과 성노예범죄 등 과거범죄 부정행위와 역사왜곡 책동은 재침의 전주곡”이라며 이는 “반드시 계산될 것”이라고 강조(2.11,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내각 관방장관 등의 성노예범죄 부정 속심은 “과거 범죄들을 부정, 미화하여 현재의 일본을 과거의 전쟁국가로 변모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보려는 것”이라며 과거청산 촉구(3.4, 조선중앙통신·민주조선)
 -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 겸 오사카 시장의 발언에 대해 “1년 전의 망언을 되풀이한 것으로 인류를 두 번 다시 욕되게 하고 과거범죄를 또다시 부정하는 망발”이라고 비난(5.29,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6.12,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 하시모토 시장은 2013년 5월 13일 기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필요했다”고 발언했으며, 1년 전의 해당 발언이 문제될 것은 없으며 이 발언으로 일본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위안부 제도를 알 수 있게 됐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주장
- 북한은 위안부 강제동원 문건을 거론하며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비판
 - 미군 비밀해제 문서를 거론하며 “일본군이 여성들을 군수물자처럼 여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온갖 추악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위안부는 일본 정부와 군부의 조직적으로 감행된 특대형 반인륜 범죄”라고 비난(3.18, 조선중앙통신/ 4.1,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공개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미군 비밀해제 문서는 일본군 포로 심문 및 중국 여자 간호사 인터뷰를 통해 일본 군의관들이 위안부를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을 입증(3.13)
 - 중국 지린성 기록보관소의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문건을 공개한 연합뉴스를 인용 보도하며 “일본의 성노예 범죄가 국가적 조치에 의해 감행되었다”고 비난(3.27, 조선중앙통신/ 4.9,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 중국 지린성 기록보관소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를 25건 발굴하여 공개하였으며, 이 사료들은 위안부의 강제성을 입증(1.8)
 - 국제사회의 일본군 위안부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언급하며 “일본은 그 무엇으로써도 과거 성노예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위안부는 일본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이며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6.16, 조선중앙통신)

역사 왜곡 비판과 과거청산 촉구

- “최근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비뚤어진 역사관과 도덕적 저열성이 강하게 문제시 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과거청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며 과거청산의 용단을 촉구(2.12, 조선중앙통신·민주조선)
- 일본의 과거사 부정·왜곡을 지적하고 “반인륜적 범죄에는 절대로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일본은 과거범죄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는 것으로써 역사의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3.9,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일제의 과거범죄는 국제적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 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려 봤자 얻을 것은 국제적 고립뿐”이라고 과거사 인정 및 사죄와 배상 촉구(3.22,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과거청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방증”으로 “그릇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은 일본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촉구(5.3, 조선중앙통신)
 - * 아베 총리는 2014년 4월 30일 유럽 순방 중 독일 방문 시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와 유럽이 처한 상황이 달랐으며 일본은 상황에 맞는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독일식 전후처리방식을 따를 수 없다”고 발언

고노 담화 검증 비판

-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일본 문부과학성 부상의 ‘고노 담화 부정’ 관련 “일본의 과거침략사와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덮어버리려는 날강도적인 처사”라며 “강짜를 부린다고 범죄의 역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3.18,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을 위한 검증팀을 만들고 첫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뒤집고 군국화, 우경화를 다그쳐 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하며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6.4,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북한은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및 웨손은 “그릇된 역사관의 집중적 발로”라며 “국제적 고립과 정치적 파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고노 담화 왜곡 부정행위 중단 촉구(6.23, 조선중앙통신)
 - * 일본 정부는 2014년 6월 20일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발표)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 문안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

납북자 관련 북·일 회담

- 북한 매체들은 납치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일 회담 결과를 보도(5.29,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
 - 보도에서 북한은 납치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종래의 입장이 있지만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설명
 - 또한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 조치를 최종적으로 해제할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도 지적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 비판〉

COI 활동 및 보고서 비난

-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로이터에 보낸 2쪽짜리 성명에서 COI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인권 보호를 빌미로 한 어떠한 정권교체 시도와 압박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에는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력히 반발(2.17)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COI 보고서가 탈북민과 범죄도주자 등이 지어낸 허위·날조 자료를 모은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전배격한다”고

주장(2.21, 조선중앙통신)

- COI를 미국과 미국의 추종세력이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날치기로 조작해낸 ‘허수아비’라고 격하
- “인권을 구실로 국제형사재판소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요 뭐요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생억지를 부리며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열을 올리는 것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감히 깎아내리고 압력도수를 높여 우리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극히 위험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

- 북한은 COI 보고서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감행하고 있는 추악한 적대행위의 산물”이라고 비난(2.28, 조선중앙통신)
 - 마이클 커피 COI 위원장에 대해서도 “워싱턴의 요구에 따라 증거를 조작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서 공화국을 반대해 미국이 조종하는 국제공조에 복무”하고 있다고 주장
 - 이에 더불어 미국이 오히려 여러 곳에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관타나모 등 감옥에서 수많은 포로들을 학대하는 ‘인권유린의 왕초’, ‘인권의 동토대, 인간생지옥’이라고 비난
- “보고서 내용이 100% 날조된 것인데다가 그것을 꾸며낸 나라들부터가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안고 있는 인권의 최후진국들”이라며 미국의 빈부격차를 지적하며 “그중에서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라고 비난(3.4, 조선중앙통신)
-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마이클 커피 위원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항의 퇴장(3.17)
 - 서세평 대사는 “국제형사재판소요 뭐요 하고 말도 되지 않는 생억지를 부리는 것은 우리를 어찌보려는 망상으로서 가소롭지 그지없다”고 평가절하했으며, “우리는 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인정조차한 적이 없으며 끝까지 반대 배격할 것”이라고 발언
 - 또한 발언권이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합회’ 대표에게 넘어가자 서세평 대사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다른 대표부 직원들도 함께 퇴장, 북한에서 온 최명남 국제기구국 부국장 등 몇 명만 잔류
- 북한은 COI 보고서 제출과 관련 “이것은 명백히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현의 새로운 침략방식으로서의 인권소동이며 현대판 전쟁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미국 강경 비난(3.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매체는 4월 17일에 있었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직접적 비난(4.22, 조선중앙통신)
 - * 커비 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비공식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지도부의 ICC 회부 등 국제사회가 즉각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 북한은 커비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모략 날조품에 신빙성을 부여했다”고 배격 및 “단단히 결산할 것”이라고 강조
 - 또한 커비 위원장의 성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40여 년간 동성연애로 추문을 남겼다”며 “이른바 법관의 감투를 쓰고 한 짓이 있다면 자기나라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동성결혼의 법화를 위해서 미쳐돌아간 것뿐”이라고 매도
 - 다른 COI 위원들에 대해서도 “자기 조국과 민족을 정치도덕적으로 배반하는 데 앞장선 자들” “다른 나라와 지역 문제들에 개입해서는 미국 등 서방나라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사회적 불안과 긴장만을 조성해온 범죄자들”이라고 거칠게 비난하면서, COI가 지난 2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도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인간추물들의 비열한 조작품”으로 폄훼

북한인권결의 채택 비난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인권이사회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전면 배격(3.31, 조선중앙통신)
 - 대변인은 북한인권결의를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폄하하며 “진정 인권을 논한다면 미국·일본·EU나라의 반인륜 범죄부터 국제적인 형사재판기관에 회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회의 북한인권 논의 비난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비난(4.19, 조선중앙통신)
 - 대변인은 “미국은 유엔 헌장에 규제된 권능에도 어긋나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의 인권문제를 공식 의제로 취급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여놓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궁극에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

-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증언한 탈북민들에 대해 “나라와 인민에게 씻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 도망간 범죄도주자들로서 우리 제도에 반기를 든 테로(테러) 분자들”이라고 주장

UPR 보고서 제출

- 북한은 5월 1일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회의 UPR을 앞두고 보고서를 제출(3.26)
 - 보고서에서 법 제·개정 등 지난 4년 동안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
 - 그러나 유엔이 매년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COI에 대해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라며 전적으로 배격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고위급 인사 UPR 회의 파견

- 북한은 UPR 회의에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과 이경훈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부위원장 등 고위급을 대거 파견(5.1)
 -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유엔 인권협약을 존중해 국민의 인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인권관련법을 수정·보충했다”며 “12년제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등 아동과 여성 인권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
 -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UPR은 동등하고 평등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려 한다”면서도 COI의 설립목적에 문제를 제기하며 “어느 국가도 주권을 침해당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중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인권 문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 이경훈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부위원장은 “선군정치는 자주권을 지키는 근본이며, 헌법 65조는 모든 국민이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듯 성분이라는 구분은 없다”고 응하고,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정

4. 남한에 대한 반응

〈남한 내의 인권 문제 비판〉

‘남조선 인권백서’ 발표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남조선 인권백서’ 발표(4.29,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
 -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며 남한을 ‘인권 불모지’로 규정하고 “이번 대형사고는 전적으로 괴뢰정권의 반인민적 정책이 빚어낸 것”이라고 비난
 - 자살 사건뿐 아니라 실업, 빈곤, 폭력 문제를 보여주는 각종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제반 사실들은 괴뢰패당이야말로 인권유린 왕초, 특대형 인권범죄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 문제를 시비하기 전에 제 집안의 심각한 인권 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며 “미국과 괴뢰패당은 비열한 반공화국(반북) 인권모략 소동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고 언급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미행 비난

- 북한은 남한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한 사건을 거론하며 “비열하고 파렴치한 비인간적 처사”이고 “괴뢰패당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야수의 무리, 초보적인 인륜 도덕도 모르는 악의 집단”이라고 비난(5.26, 조선중앙통신)

안전 재해문제 관련 비난

- 북한 매체는 MBC방송을 인용하여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안전 재해들에 대해 비난
 - ‘고양종합터미널 화재’(5.26) 사실을 보도하며 “남조선인민들이 어디서 또 어떤 사고로 재앙을 입을지 몰라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5.28, 조선중앙통신)
 - 전라남도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5.28) 사실을 보도하며 “세월호 참사에 이어 연이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주장(5.29, 조선중앙통신)

조작 사건의 무죄 판결 보도

- 북한은 서울고등법원의 고(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선고와 대법원의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재심 무죄 판결(5.29)을 거론하며 “과거 파쇼 독재정권시기 조작된 모략사건들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6.1, 조선중앙방송)
 - *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은 1963년 대연평도에서 20톤급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가 돌아온 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유엔에 남한의 인권유린행위 주장 자료 등재 요청

- 2014년 6월 2일 남한의 인권유린행위를 주장하는 자료들을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공식문건(A/68/869-S/2014/321호)으로 배포(6.3,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조선인권대책협회가 발표한 남조선 인권백서 ‘세계최악의 남조선인권실태를 고발한다’와 조선중앙통신사 기사 ‘쓰디 쓴 고백, 참담한 반 인권현실’ 제출

〈북한인권 실태 고발 및 관련 활동 비판〉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노력 비난

-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려는 악랄한 책동”이라고 비난(1.17)

드레스덴 구상의 인도주의 제안 비난

-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남북관계의 인도주의를 강조한 데 대해 우리 해군의 북한 어선 나포 사건을 거론하며 남한이 인도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4.8, 조선중앙통신)

남한 정부의 북한인권결의 참여 비난

-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남한 정부가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지적하는데 대해 “민족반역 무리들만이 할 수 있는 히스테리적 망동, 자가당착의 어리석은 행위”라고 신랄히 비난(4.9, 조선중앙통신)

남한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대한 비난

-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인권 상황 지적에 대해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증상”이라며 “치절한 대가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4.30, 평양방송)

〈NLL 침범 북한 어선 나포 및 송환 비난〉

- 북한은 남한 해군의 ‘NLL 침범 북한 어선 나포 및 송환’에 대해 강압성을 주장하며 비난
 - “무지막지한 행위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과 “단호한 실천행동으로 징벌할 것” 등을 다짐하는 각 계층의 반향을 소개(3.30, 조선중앙통신)
 - “강압적 나포, 무지막지한 강패행위”라고 왜곡 주장 반복 및 “천백배의 대가를 받아낼 것” 등 위협 지속(3.31, 평양방송)
 - “강압적 폭행·나포”를 재차 주장하며 “괴뢰 해군 강패무리들이 저지른 치 떨리는 만행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의 철추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4.1, 평양방송)
 - “비인간적인 인권유린행위”라고 지속 비난하고 최성진(조선작가동맹 작가) 등의 “해적무리들을 징벌의 포화로 씨도 없이 죽탕쳐 버려야 한다”는 반향을 소개(4.2, 조선중앙통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비난〉

- 북한은 COI 결과보고에 따른 남한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움직임에 대해 다각도에서 비난을 지속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한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국내 유치 움직임에 대해 “우리(北) 인민과 제도를 모독하고 우롱하는 특대형 도발,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4.21,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
- 남한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인권모략기구를 남조선에 들여앉히고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더 한층 확대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가장 무자비하고 단호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및 ‘인권소동’ 중단 촉구(4.22, 평양방송)
-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남북관계를 더욱 엄중한 사태로 몰아가는 극도의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4.23,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조선중앙방송)
- “북남관계의 총체적파국을 기정사실화한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연일 비난 공세를 이어가며 “극히 무모한 동족 적대행위”라고 주장(4.24, 조선중앙통신)
- “동족대결 광신자들의 도발적 음모”라며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 영상을 흐리고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 압박공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5.14, 평양방송)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권 위기의 심화를 막고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들어 놓은 저들의 죄악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6.4,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과 유엔에 구걸해 북인권사무소라는 것을 남조선에 내오기로 최종승인을 받았다”며 “그리고는 굉장한 성과라도 낸 듯이 보수언론들을 동원해 법석 떠들어댔다”고 폄하(6.9, 우리민족끼리)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남한 설치 결정 관련 “정의와 진실에 대한 우롱, 인권에 대한 모독, 유엔의 체모를 손상시키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면서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광분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6.9,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는 “체제에 대한 모독이며 동족대결 격화를 노린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고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반발 및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6.11,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조선중앙방송)

5. 분석 및 평가

COI 보고서에 대한 정치적 대응

- COI 최종 보고서 관련 이 보고서가 미국의 조종에 의해 인권을 빌미로 한 정치적 모략이라는 북한의 비난 공세가 상반기 가장 두드러진 북한의 목소리
 - 북한은 COI 보고서가 날조된 것이며 미국의 정략적 목적에 의해 조작된 사실이라며 보고서 내용 자체를 강력 부정
- 북한 반응의 특징은 유엔보다는 미국을 배후 조종자로 지목하여 비난을 집중시킨 점인데, 이것은 보고서 자체를 '정치화'하기 위한 전술로 판단 가능
 - 북한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상대로 정면으로 비난 공세를 펼치기 보다는 미국을 배후 조종자로 간주하여 비난 공세를 펼치는 것이 보고서를 정치화하여 권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
 - 미국의 국내외 인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함께 언급하거나 유엔 기구 자체보다는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의 개인 신상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막기 위해 남북관계 파국론으로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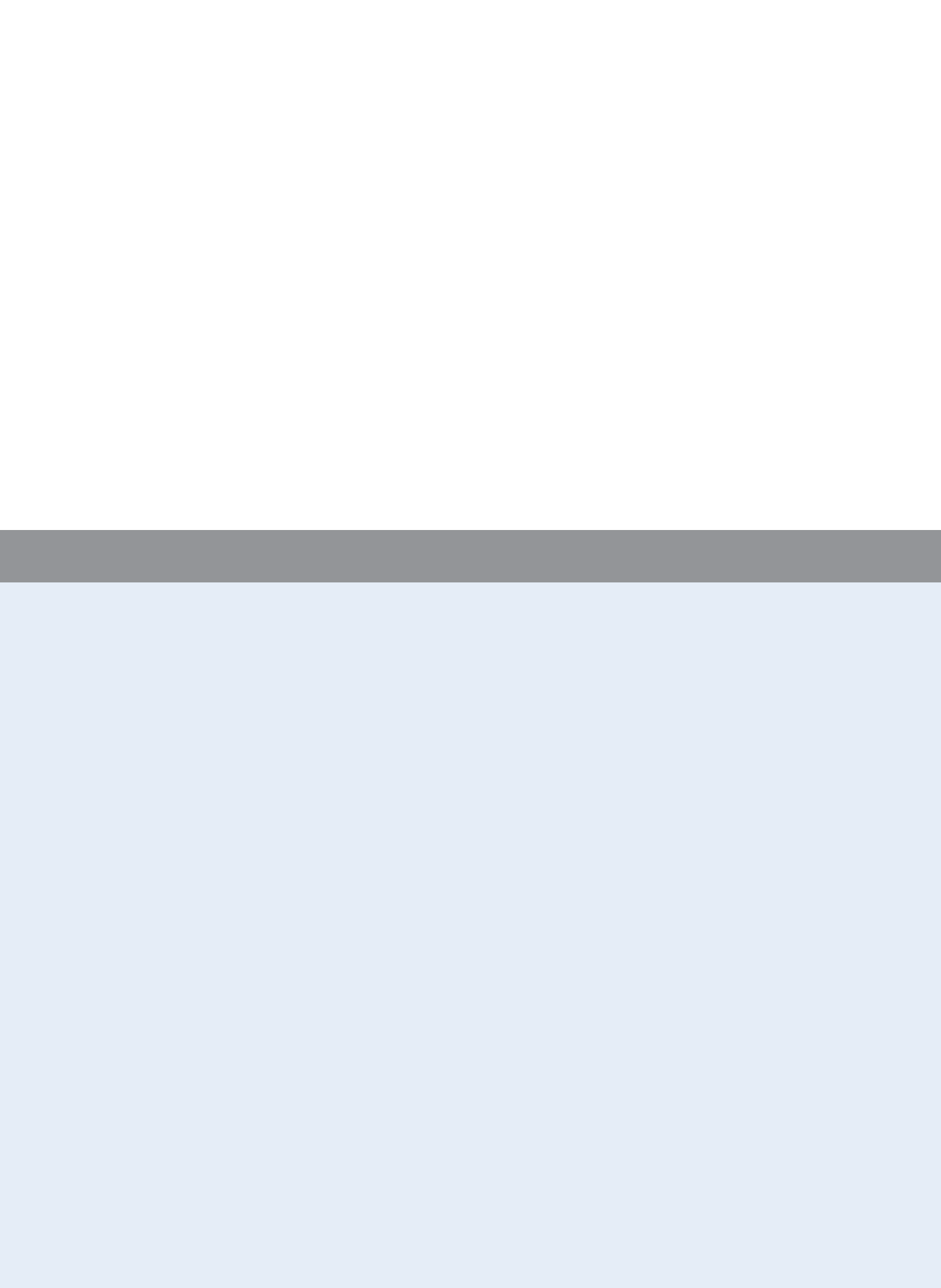
- 북한은 남한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 움직임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남북관계의 파국론으로 맞서며 위협
 -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국내 유치를 '도발', '선전포고', '동족 적대행위'로 간주하며, 남북관계를 더욱 엄중한 사태로 몰아가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
 -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탈북민들을 통한 인권 침해 사례의 축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한 반응
 - 또한 조사 과정에서 탈북민의 북한 내 가족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인권 의식이 북한 내부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
 - 향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남한에 설치되고 본격 조사활동이 이루어지면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UPR 일부 수용 등 국제사회 압력 일정한 효과

- 북한이 유엔의 인권개선 권고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등 변화된 모습이 확인
 - 북한은 2009년 1차 UPR 시 상당수 권고를 수용한 이후, 2014년 2차 보고서에서 「지진화산피해방지구조법」을 제정하고, 국가재난기구 설치 등 재난 및 안전을 인권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있어 건강·교육·식량권과 문화생활 권리를 상당 부분 포함
 - 또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례적으로 ‘취약계층(vulnerable groups)’이라는 용어를 사용
 - 북한 역시 유엔 인권협약을 존중해 국민의 인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인권관련법을 수정·보충했다고 설명
-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조심스런 평가가 가능
 -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실제 현실에서 준수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지만 국제사회의 규범을 북한이 의식하도록 함으로써 최악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
 - UPR 제도가 북한 당국이 보편적인 인권 개념을 수용하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인권 차원의 대화를 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증명

일본 역사문제 비판 수위 높이며 북·일 회담 협상 채널 본격 가동

- 2014년 상반기 일본의 역사 왜곡 및 우경화 경향에 대한 비판의 양적 증가 속에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와 관련 북·일 회담을 진행
 - 북한은 아베 총리 및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부정 및 역사 왜곡, 고노 담화 검증 등 여러 문제들을 ‘반인륜 범죄’라고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비난
 - 한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일 회담을 진행하여 일본인 문제 해결 및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
 - 2014년 상반기 일본에 대한 ‘반인륜 범죄’ 비판의 양과 수위를 높인 것은 북·일 회담에서의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 가능



인도주의 사안



1. 탈북민	37
2. 납북자	50
3. 국군포로	62
4. 이산가족	63
5. 분석 및 평가	68

1. 탈북민

영국 외무부, 한국 내 탈북민 대상 영어 교육

- 영국 외무부는 탈북민들에게 영어 교육 장학금 프로그램 ‘English for Future’를 제공하기로 결정(1,2)
 - 선발된 탈북민들은 주 3회 가량 영어 강좌를 듣게 되며, 인터넷에 선발된 탈북민들은 언론사, 대기업, 문화원, 국제기구 등에서 일하고 본인의 경력에 따라 보수도 받게 됨

광주지법, 30대 탈북민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캐피탈사를 통해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탈북민 A(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1,7)
 - A씨는 2012년 8월 7일 캐피탈사를 통해 5,800만 원을 대출받아 고급 승용차를 구매한 뒤 차량을 타인에게 팔아 돈을 챙기고 대출금은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
 - 재판부는 “대출금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탈북민인 피고인이 우리 국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의자, 수사관 고발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의자 유우성(34) 씨는 국정원과 검찰의 가혹행위에 의한 진술 조작과 검찰의 출입국 자료 조작 등을 근거로 성명미상의 수사관들을 증거인멸 및 조작 혐의(「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로 경찰청에 고발(1,7)

통일부, 2013년 국내 입국 탈북민 집계 발표

- 통일부가 2013년 한 해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을 1,516명으로 집계하면서 국내 입국 누적 탈북민은 26,124명으로 증가(1,13)
 - 2013년 입국 탈북민 가운데 여성은 1,145명으로 76퍼센트를 차지

- 국내 입국 탈북민 규모가 감소한 것은 김정은 체제 들어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탈북민 단속에 나서고 체제 선전 차원에서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을 다시 북한으로 데려가는 공작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북한 인민보안부, 국경경비 대폭 강화

- 데일리NK는 북한 인민보안부가 장성택 처형 이후 주민 단속을 위한 '4대 지침'을 전국에 하달한 가운데, 주민들의 탈북 행위를 김정은을 배신하는 '최고 존엄 훼손죄'로 규정하고 국경경비를 대폭 강화했다고 보도(1.15)
 -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평양 소재 인민보안부 소속의 정치대학 졸업반 학생들로 구성된 비사회주의 검열조가 조직"되었고 "검열 시작과 동시에 국경경비가 더 강화돼 탈북하다 체포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경기지방경찰청, 탈북민 고용지원금 빼돌린 사회적 기업 2곳 적발

-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실제보다 많은 탈북민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지원금을 챙긴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적 기업 운영자 서모(5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1.18)
 - 서 씨는 성남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년간 실제로 고용한 25명보다 많은 31명의 탈북민이 일하는 것으로 속여 6명에 대한 고용지원금 2천여만 원을 더 받아 빼돌린 혐의
 - 화성의 한 사회적 기업 업주와 직원도 같은 기간 탈북민 6명을 더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고 1,1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챙기다가 적발

충남 경찰, 탈북민 지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입건

- 충남 홍성경찰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금과 고용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영농조합 법인 대표 김모(55) 씨와 송모(31) 씨 등 탈북민 3명을 불구속 입건(2.3)
 - 김 씨는 2012년 9월 자신의 영농법인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 탈북민을 고용하는 대가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받은 시설자금 1억 원 가운데

일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

- 또한 송 씨 등과 짜고 실제 채용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일을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이들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 1천만 원도 부정 수령

울산지법, 필로폰 밀수입 탈북민에 징역3년과 추징금 510만 원 선고

- 울산지법은 노트북 컴퓨터 충전지에 숨긴 필로폰을 국제택배로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탈북민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510만 원을 선고(2.14)
 - A씨는 노트북 컴퓨터 충전지 속에 필로폰 10g을 숨겨 국제택배로 받는 수법으로 2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
 -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지 않은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해 죄질이 나쁘지만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
 - A씨와 공범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3.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탈북민 정착지원 의료봉사단 발족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2.25)
 - 의료봉사단 발족은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의 일환으로, 이 운동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탈북민과의 일대일 멘토링 △법률지원 △의료지원 △장학지원 △취업지원 등 ‘5대 중점사업’을 전개하는 실천운동

제3국 탈북민 체포

- 사단법인 물망초는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민 3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설명(3.3)
 - 탈북민 3명은 강모(19), 윤모(28), 윤모(26) 씨로 알려졌으며, 정부 관계자는 “이들의 안전하고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 교도통신은 태국 경찰이 7일 북한을 탈출해 밀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13명을 북부 치앙라이에서 체포했다고 보도(6.9)
 - 통신은 체포된 사람들은 중국과 라오스 등을 경유해 태국에 도착했으며, 다시

제3국으로 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정부 당국자는 “해당 공관에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른 신병) 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전망

- 정부 당국자는 태국에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하여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21명이 태국 당국에 체포됐으며 한국 등 제3국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6.24)
 - 당국자는 “태국 현지 우리 대사관이 22일 탈북민들이 체포된 사실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

서울 수서경찰서, 빈집털이 20대 탈북민 구속

- 서울 수서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서울과 경기권 고급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나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금품을 털 혐의(특수절도)로 탈북민 이모(24) 씨를 구속했으며, 망을 보며 범행을 함께한 공범 A씨도 추적 중(3.11)
 - 이 씨 등은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말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권, 경기도 화성·일산·분당 신도시 등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총 8,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
 -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한국은) 북한의 경제체제와 달라 적응하기가 어려웠으며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

교육부, 탈북학생 대상 각종 프로그램 진행

- 교육부는 우수 탈북학생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한 ‘HOPE 프로그램’을 수학, 과학, 체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3.12)
 - 학교나 가정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과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탈북학생을 위한 교과서 종류도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표준용 교재 12종을 개발 보급하고 내년까지 32종을 인정도서로 보급할 계획
 - 또한 탈북학생이 직업교육을 하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진학 등을 희망할 경우 특례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

경기도, 탈북여성 보육교사·간호조무사 양성

- 경기도는 2010년부터 탈북여성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 말부터 탈북여성 간호조무사 양성과정도 운영(3.20)

경찰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탈북민 지원 MOU 체결

- 경찰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3.21)
 -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중앙 및 지역조직 간 협력체계를 구축, 탈북민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기로 합의했으며, 세부적인 지원사업은 △탈북청소년 멘토링 △법률자문지원 △취업지원 △장학지원 △의료봉사 사업 등 5개 분야

중견 탈북기업인, 투자금 모집 잠적

- 경기도 파주에 공장을 둔 H무역 관계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주로 탈북민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기업신화'를 일궈낸 것으로 알려진 중견 탈북기업인 H(49) 씨가 최근 중국 출장 중 잠적(3.26)
 - H씨는 여직원 3명과 함께 중국 출장을 갔다가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동행한 직원들은 중국 공안과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실종 신고를 하고 귀국
 - H씨는 탈북민들에게 이자를 주기로 하고 투자금을 모집해와 투자자 일부는 H씨가 단순 실종된 것이 아니라 잠적한 것으로 추정
 - H무역에 투자한 탈북민 투자자만 410여 명, 투자 원금만 113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H씨는 탈북민들의 투자금 외에도 파주시에 있는 공장 부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200여억 원의 대출을 받는 등 총 400여억 원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

간첩사건 증언 탈북민, 비공개 증언 유출 주장 및 고소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비공개로 법정 증언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민이 자신의 신분이 북측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
 -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2013년 12월 6일 유 씨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지난 1월 16일 재판부에 북한에 남기고 온 자녀가 자신 때문에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4.1)
 - 검찰 관계자는 탄원서 내용과 관련해 "실제 북한에 A씨의 신원이 넘어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소송관계인의 열람 등사 신청에 따라 열람 등사를 허용해 줘야 한다"고 하며 "부적절한 문건유출은 없었다"고 설명
 - A씨는 "나의 신원과 증언 사실이 북한에 알려져 가족의 생사가 위협에 빠졌다"며 증언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4.7)

수원지법, 의붓딸 성추행 30대 탈북민에 징역 6년 선고

-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0대 의붓딸 2명을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딸을 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폭행 등)로 기소된 차모(37) 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4.6)
 -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키워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통일부, 1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 360명

- 통일부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은 360명으로, 2012, 2013년 같은 기간 319명, 352명과 비슷한 수준(4.8)
 - 월별 입국자는 1월 153명, 2월 111명, 3월 96명

하나원-경상대병원, 탈북민 의료지원 협약 체결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경상대학교 병원과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협약을 체결(4.8)
 - 통일부는 이번 협약으로 경남지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

북한인권단체, 탈북민 구출

- 토론토 소재 북한인권협회의회의 '생명의 동아리' 프로젝트는 2013년 10월에 7명, 2014년 2월에 5명의 재중 탈북난민을 구출한데 이어 2014년 3월에 5명을 구출(2.20, 4.9)
 - 3월에 구출된 두 가족 중 한 가족은 2010년에 탈북한 3명(50대 부부와 24세 딸)이고, 다른 한 가족은 올해 초 탈북한 2명(5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으로, 특히 이 모자는 발가락에 심한 동상을 입어 어머니의 경우 발가락 두개를 절단한 상태
 - '생명의 동아리' 프로젝트는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난민들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을 경유해 안전국가인 태국으로 인도함으로써 무사히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구출활동을 하는 현지 선교사에게 자금을 지원
-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링크(LiNK)는 3월 말까지 중국 내 탈북민 17명을 구출하면서 총 231명의 탈북민을 구출했다고 발표(5.14)
 - 2013년 '북한과의 가교(Bridge to North Korea)'라는 탈북민구출기금 마련 운동을 벌여 한국,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탈북민 구출운동을 지원

서울고법, 간첩 혐의 서울시 공무원 무죄 판결

-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고, 「여권법」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 선고(4.25)
 -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사기죄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형량은 1심과 동일

- 재판부는 탈북민으로 가장해 지원금을 부당수급하고, 동생까지 탈북민으로 꾸며 입국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구속기소돼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
- 재판부가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핵심 증거인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기인

국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탈북민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사업이 내년에 시작(5.2)
 -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근로 소득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쌓아주는 정기 적금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부처 간 협의 절차가 남았지만 통일부는 가입 금액의 경우 최대 월 50만 원, 가입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정한다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세운 상태
 - 이 방안이 확정되면 매달 50만 원씩 4년을 넣으면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이 생기는데, 이 경우 정부가 탈북민 1명에게 최대 2,400만 원을 추가 지원
 - 정부는 미래행복통장으로 형성된 자산이 주택구매 및 임대, 교육, 창업 등에만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할 방침

호주 시드니공대(UTS), 탈북학생 장학제도 신설

- 시드니공대(UTS)는 '북한 이주자를 위한 UTS 인서치 장학프로그램'을 신설(5.3)
 - 매년 탈북 학생 2명을 선발해 1만 2천 호주달러(약 1,145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부속 영어교육기관에서 6개월 과정의 영어연수 기회를 제공

수원지법, 「국가보안법」 위반 50대 탈북민에 징역 5년 선고

-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선고(5.25)
 - A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보위부 일을 돕던 중 당시 북한을 탈출해 한국 국적을 얻은 뒤 중국에 머물던 B씨가 딸을 탈북시키기 위해 북한 주민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알게 되어 보위부 지령에 따라 딸을 명목으로 B씨를 유인했으나 미수

- 이후 한국영화를 시청한 죄로 수감된 A씨는 검찰소를 탈출해 2000년대 중반 귀순했으나, 사기에 탈북 전 보위부에 협력한 혐의까지 더해져 2013년 12월 기소
- 재판부는 “B씨를 북한 당국에 넘길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보위부 지령에 따라 범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B씨의 어린 딸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

검찰,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구속기소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민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 홍모(40) 씨를 적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3.10)
 - 홍 씨는 지난해 6월 지령을 받고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A씨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탈북민 및 탈북민 단체, 국정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단순 탈북민을 가장해 2013년 8월 국내에 잠입한 혐의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수용(5.12)
 - 검찰은 “재판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밀접한 사실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반면,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가명 처리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
 - 재판부는 수사기록 분량이 3천~4천 쪽에 달하고 신청된 증인이 20명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연속해서 재판을 열기로 결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당초 예정되었던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국민참여재판 계획을 취소(5.26)

- 재판부는 증거조사 및 증인 신문이 장기화 우려 및 배심원의 언론기사 접촉·노출 가능성, 그로 인한 예단·선입견 형성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
- 홍 씨 측은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항고(6.2)

간첩 혐의 홍모 씨, 합동신문센터 조사 위헌 헌법소원 제기

-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이뤄진 조사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6.25)
 - 홍 씨를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정원이 홍 씨를 상대로 행한 합신센터 강제조사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
 - 홍 씨 측은 “국정원 조사는 단순한 행정조사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다”며 “알몸 수색 및 소지품 검사, 지문채취, 사진 촬영, 거짓말 탐지기 조사, 진술서 작성 강요 등으로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

〈해외 입국자〉

미국 국무부, 미국 입국 탈북난민 수 갱신

- 미국 국무부는 인구난민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의 난민입국보고서 및 난민 입국 현황 자료를 통해 미국 입국 탈북난민 내용을 지속적으로 갱신(1.3, 2.5, 4.1, 5.8)
 - 난민입국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 입국 탈북민 수는 14명에 불과하며, 특히 2013년 9월 1명의 탈북민이 난민지위를 받은 이후 3개월간 미국 정부는 단 한 명의 탈북민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고
 - 2013년 10월 시작된 미국 2014 회계연도에는 처음으로 2014년 1월에 탈북난민 1명이 미국에 입국한 이후로 3월에 2명, 4월에 1명이 미국에 입국

러시아, 탈북민 100여 명 임시 망명 허가

-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탈북민 100여 명에게 임시 망명을 허용(2.4)
 - 블라디미르 루체이코프 이민국 난민담당 과장은 “북한 주민 100여 명이 인도주의적 취지에서 임시 망명을 허가받았고 그 가운데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은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
 - 러시아 정부가 임시 망명을 허락한 탈북민들은 대부분 시베리아에 벌목공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로 추정
 - 난민이나 임시 망명을 허가받은 탈북민 가운데 한국행을 원하는 이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향하지만, 차비 등 여행비용 약 500달러 (약 54만 원)를 구하지 못해 난민 승인을 받고도 시베리아에 머무는 탈북민이 다수이며, 모스크바에 어렵게 도착한다 해도 러시아 당국이 이들의 한국행을 잘 승인해주지 않아 1년 정도 안가에서 대기해야 하는 실정

캐나다, 탈북난민 심사 강화로 탈북민 수용률 급감

-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이 최근 새로 집계한 난민입국자 통계(Claims Referred and Finalized: North Korea)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2013년 257건을 심사해 21명의 탈북민을 난민으로 수용해 난민 수용률이 8퍼센트에 불과(2.10)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캐나다의 탈북민 난민 수용률이 70퍼센트를 넘어 80퍼센트에 가까웠던 것을 고려할 때, 캐나다의 난민 수용률이 급감
 - 2013년 봄 캐나다와 한국 정부 간에 지문 공유를 시작한 것이 그 이유로 추정
 - 캐나다가 2012년 12월 15일부터 새로운 난민수용 규정 도입하여 한국에 대해 2013년 5월 3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하는 탈북민 수가 상당히 감소
-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한 탈북민 출신자 600여 명이 위장 난민신청 등을 했다가 적발돼 대거 추방될 위기(3.14, 4.2)
 - 캐나다 정부는 최근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자들의 위장 난민 신청이 늘어나면서 관련 심사를 엄격히 하고 위장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추방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미 난민을 허가해준 탈북민 출신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

- 한 외교소식통은 ‘위장 탈북민’들의 위장 난민 신청으로 인해 진짜 난민지위가 필요한 ‘진성 탈북민’들이 입을 피해를 우려
- 온타리오한인교회협의회와 토론토한인회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탈북난민의 추방을 중단해 달라며 서명운동을 전개(4.4)
 - 최근 캐나다 연방 정부가 한국을 거쳐 캐나다에 들어온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정책을 강화하면서 600여 명의 탈북난민이 추방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
 - 두 단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했건 아무 대책 없이 탈북민들이 추방당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연감 공개

-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민연감에서 지난 2009~2013년 5년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민 등 북한 국적자 수가 총 1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6.10)
 -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8명, 2010년 13명, 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27명 등
 - 북한 출신자의 시민권 취득은 대부분 탈북민들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남북하나재단〉

남북하나재단, ‘착한(着韓) 협업모델’ 진행

- 남북하나재단(이하 “재단”)과 금융감독원은 북한이탈주민 금융 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2.24)
 - 남한 사회의 금융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및 상담을 통해 금융 피라미드, 보이스 피싱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
 - 재단과 금융감독원은 △탈북민 대상 금융 교육 및 상담 △탈북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시설 및 방과 후 공부방 지원 △금융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공동 개발 및 운영 등의 분야에서 협조해 나갈 예정
 - 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이 통일을 준비하는 ‘착한(着韓·대한민국에 정착)

- 협업모델을 만들기 위한 재단의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
- ‘착한 협업모델’이란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국내외 역량 있는 기관의 남북통합 관련 사업과 서비스를 발굴, 이를 탈북민의 현실적 필요에 접목한 새로운 모델
- 재단과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는 공익법률활동 협력 등에 관한 MOU를 체결(3.21)
 - 탈북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령의 제·개정 및 관련 제도개선 자문, 탈북민 관련 공익소송의 대리 및 수행지원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
 - 재단과 사단법인 창조와혁신은 탈북대학생 관련 멘토링 MOU를 체결(3.27)
 - 탈북대학생들의 학업지원과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로 육성하려는 목적
 - 재단과 창조와혁신은 △인성, 기업경영, 문화예술 등 분야별 특강 △일대일 및 그룹 멘토링 △예비 사회인 교육 △역사·문화체험 등을 진행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
 - 재단과 대한주택보증은 탈북민의 초기 정착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착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4.1)
 - 착한 기부금은 탈북청소년이 24시간 생활하는 그룹홈과 공부방의 열악한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조무사양성 훈련과정 등에 지원될 예정
 - 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북한이탈주민 착한 법률지원 MOU를 체결(4.23)
 -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탈북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법률적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펼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
 - 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지원 △법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
 - 재단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일사일통(一社一統)’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5.9)
 - 재단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
 - ‘일사일통’은 한 회사당 한 명의 탈북민을 채용하여 이들을 통일을 대비하는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고, 남북한 출신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기업 내 작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한 시도로, 앞으로 300여 중견기업에 고정된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

- 이번 협약을 통해 채용되는 탈북민은 2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
- 재단과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착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희망나눔’ 프로그램 운영과 ‘희망진료센터’를 통한 의료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6.9)
 -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
 - 앞으로 재단은 탈북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자를 모집하고 적십자사는 이들이 ‘희망나눔’ 봉사자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데 필요한 교육, 활동안내, 봉사조직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

2. 납북자

통일부장관, 전후 납북자 가족 면담

-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전후 납북자 가족 6명을 만나 가족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이들을 격려했으며, 참석자들은 정부가 향후 납북피해가족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줄 것 등을 요청(1.24)

정부, 전쟁 납북자 추가 지정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12, 13차 회의를 열고 전쟁 납북자를 추가 지정(1.24, 5.23)
 - 12차 회의에서는 265명을 추가하였으며, 13차 회의에서는 독립운동가이자 제헌의원인 백관수 선생 등 119명을 추가
 -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전쟁 납북자는 현재까지 3,024명

일본인 납북자 가족,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은 도쿄에서 일본 정부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시위(1.26)
- 일본인 납북피해자의 상징적인 인물로 알려진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의 부모 등 납치피해자 가족은 18일 일본 참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COI 보고서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중요한 성과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할 것을 촉구(2.18)
- 이즈카 시게오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 연락회’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COI 보고서에 관해 이번에는 북한이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고서에서 납치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한 분량을 자세하고 폭넓게 다루었다며 파급효과에 대해 기대를 표명(3.4)
-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 연락회’와 지원조직인 ‘구하는 모임’은 도쿄에서 일본인 납북자의 즉시 귀국을 호소하는 ‘국민대집회’를 개최(4.29)
 - 집회에는 정부 고위 관리와 국회의원, 납북자 가족 등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집회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향해 환경이 조금씩이나마 확실히 갖춰지고 있다고 언급
 -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 연락회’의 이즈카 시게오 대표는 3월 이후 북·일 간 여러 움직임이 나온 데 기인해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
- 일본 ‘특정실종자 문제 조사위원회’ 아라키 가즈히로(荒木和博) 대표는 도쿄에서 일본 언론과 국민을 위한 특정실종자 관련 설명회를 개최(6.3)
 - 아라키 가즈히로 대표는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납북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특정실종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전하며, 이 단체가 작성한 470여 명의 특정실종자와 일본 경찰에서 분류한 820여 명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
- 납치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500여 명은 북·일 정부 간 회담을 하루 앞두고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6.29)
 -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후루야 게이지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납치 문제를 거론하며 “모두를 되찾기 위해 전력으로 임하겠다”며 피해 가족들에게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

국제사회, 일본인 납북자 관심

- 캐롤라인 케네디(Caroline Kennedy) 주일 미국 대사는 방일 중인 글린 데이비스(Glyn T. Davies)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함께 일본인 납북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 가족과 면담(1.30)
- 디디에 부르크할터(Didier Burkhalter) 스위스 대통령은 방일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태지역 안보 증진을 위해 역내 어떤 나라들 간의 대화를 중재할 용의가 있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2.6)
-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비공개 면담(4.24)

서울남부지법, 특례법을 적용하여 북한 주민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판결

-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은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결(2.10)
 - 이는 2012년 5월 「납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

KAL기 납북자 가족, 통일부에 방북 신청

-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이하 “가족회”)’의 황인철 대표는 북한 적십자사를 찾아 부친의 생사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통일부에 방북 신청(2.14)
 -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의 초청장 없는 일방적 방북을 정부가 허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
 - 황 대표는 KAL기 납치피해자 생사 확인 및 송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성이 문제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북한에 정당한 요구를 못하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가장 실망스럽다”고 지적

- 가족회는 서울종합청사 통일부 앞에서 납치피해자 문제에 소극적인 정부를 비판하고 납치된 부친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재차 방북신청(6.17)
 - 통일부 관계자는 황 대표의 방북 신청을 작성을 도와주면서 방북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북한이 보낸 초청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
 - 황 대표는 이번 방북신청도 불허된다면 통일부 장관 면담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위헌 소송까지 계획 중이라고 표명

납북어부 2명, 이산가족 상봉

- 1970년대 서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선원 박양수(58) 씨와 최영철(61) 씨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가족을 상봉(2.20)
 - 박 씨를 포함한 쌍둥이 어선 오대양 61호, 62호의 선원 25명은 1972년 12월 28일 서해상에서 홍어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고, 최 씨가 탔던 수원 32호와 33호도 백령도 인근에서 홍어잡이를 하다가 북한 해군의 함포 사격을 받고 납북
 - 정부에 의해 전시납북자로 인정된 북한의 최종석(93) 씨와 최흥식(87) 씨도 이번 상봉대상에 포함됐으나 모두 사망해 각각 남쪽의 딸 최남순(65) 씨와 아들 최병관(68) 씨가 북쪽의 이복형제와 상봉

일본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의원연맹' 피해자 구출 총력 다짐

- 일본 국회의원들의 초당파 모임인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의원연맹'은 총회를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COI 보고서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보고서에서 납치피해자를 돌려보내라고 권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2.26)
 - 일본인 납북자 모두를 하루라도 빨리 구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할 것을 표명

6·25 납북자 가족들, 제네바 북한대사관 앞 시위

-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대표단은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북한

정권이 전쟁 중 납북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데 대한 항의 시위(3.19)

- 이 단체는 성명에서 COI 보고서 조작 왜곡을 주장하는 북한 정부를 규탄하고, COI 보고서와 권고안 한글 번역본을 대사관 우체통에 넣고 시위를 종료

일본 정부, 북한에 납북자 문제 해결 요구

- 오카다 다카시(岡田隆)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 대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 UPR 실무회의에서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북한에 촉구(5.2)
 - 정치범수용소와 납치 등 북한인권 침해의 반인도성을 지적하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명확한 기한을 설정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
 - 이에 대해 북한 대표단의 한 사람은 “일본인 납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반론

서울중앙지법, 간첩누명 납북어부 국가 배상 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간첩누명을 쓰고 복역한 납북어부 고(故) 이모 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3억 1,2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6.6)
 - 재판부는 “보안부대 수사관은 영장 없이 고인을 연행해 구금하고, 구타와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증거를 조작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국가가 위헌·위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고인과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 이 씨는 1971년 9월 대북호를 타고 어로정지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으며 북한은 1년 후에 이 씨를 대한민국에 송환
 - 이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 1983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됐는데, 북에 끌려갔을 당시 사상교육을 받고 포섭돼 노동당에 입당한 뒤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와 지하당 구축을 꾀했다는 이 씨의 자백이 증거
 - 당시 자백은 영장 없이 끌려가 33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갖가지 고문을 받은 끝에 나온 허위자백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이 씨에게 징역 17년과 자격정지 17년을 선고했으며, 이 씨는 이 판결로 149개월을 복역하다 1998년 8월 가석방

- 이 씨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으며 과거사위는 2010년 이 사건에 진실규명 결정
- 유족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불법수사로 이뤄진 자백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

〈일본인 납북자 메구미 부모·딸 상봉〉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딸, 몽골서 상봉

-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부모가 요코타 씨의 딸 김은경 씨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상봉(3.10~14)
 - 상봉에 대해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북·일 당국자가 3월 3일 비공식 협의를 거쳐 김 씨와 요코타 씨 부모의 만남에 합의했으며, 이번 면회에는 요코타 씨의 남편 김영남 씨도 동석
- 요코타 메구미 씨의 아버지 시게루(滋) 씨와 어머니 사키에(早紀江)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외손녀 김은경 씨와 만난 자리에서 메구미의 행방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고 설명(3.17)
 - 상봉 장소에는 김은경 씨 외에도 그의 남편과 지난해 5월 태어난 딸도 함께 자리했다고 언급

아베 총리, 면회 성사는 납치 문제 해결 실마리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부모와 요코타 씨의 딸 김은경 씨가 최근 몽골에서 면회한 것과 관련해 “이런 변화에 근거해 납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고 싶다”고 발언(3.19)

메구미 부모, 북한의 변화 기류 주장

- 요코타 메구미 씨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열고 외손녀와의 첫 상봉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일본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읽고 납치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3.24)

- 이들은 요코타 씨의 생존을 확신하고 있음을 은경 씨에게 직접 전했다고 말했으나, 요코타 씨의 안부에 대해서는 북한 측으로부터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언급
- 상봉을 허락한 북한의 변화를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3월 말 개최되는 북·일 국장급 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명

북한, 메구미 부친에게 방북 요청

-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는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에서 지난 3월 몽골에서 외손녀 김은경 씨를 면회했을 때, 4월에 있는 김 씨 딸의 생일에 맞춰 방북해달라는 제안을 북한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4.2)
 - 메구미 씨의 아버지 시게루 씨는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머지않아 이쪽에서 북한에 가기도 하고 은경이를 일본에 초대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북·일, 메구미 딸 11월 방일 합의

- 요코타 메구미 씨의 딸 김은경 씨가 올해 11월 일본을 방문하기로 북한과 일본이 이미 합의했다는 증언이 제기(6.30)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 및 일본 소식통을 인용해 요코타 씨의 부모가 몽골에서 외손녀 김은경 씨를 만나기 전 북·일 간에 김 씨의 방일에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북한은 은경 씨의 양국 간 자유 왕래를, 일본은 영구 귀국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

〈북·일 납치 문제 재조사 합의〉

북·일 적십자 회담 개최

- 북한과 일본은 1년 7개월 만에 적십자 실무회담 개최(3.3)
 - 적십자 실무회담에는 북한 외무성의 유성일 일본과장과 일본 외무성의 오노 게이치(小野啓一) 동북아과장이 동석
 - 적십자 간 협의 의제인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반환과 일본인 유족의 북한 내 묘소

참배 허용 문제 이외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일 국교정상화 등을 의제로 하는 정부 간 공식 회담 재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일 정부 간 비공식 접촉이 있었으며, 정부 간 교섭 재개단계는 아니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등 북한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표명(3.4)

일본, 납치 문제 진전 시 대북 제재 해제 시사

- 후루야 게이지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면 대북 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표명(3.28)
- 다만 이번 북·일 정부 협상에서 납치 문제의 재조사를 요구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조치를 해제할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미국 국무부, 일본의 투명한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지지

- 마리 하프(Marie Harf)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북·일 협상에 대해 “우리는 투명한 방법으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3.28)

북·일, 정부 간 공식 협상 실시

- 북한과 일본은 베이징에서 정부 간 공식 협상을 실시(3.30~31)
- 두 나라는 국장급 정부 당국자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
-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국장은 회담 종료 후 북·일 두 나라가 앞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북한 측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설명

한·미, 북·일 비밀접촉 우려 표명

- 한국과 미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 북·일 비밀접촉 상황을 우려하며 ‘투명성’을 주문(4.8)
 - 소식통들은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미·일 북핵 회담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으로부터 북·일대화의 경위와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인권사안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지에 더불어 투명성을 강조했다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 납치 문제 해결 시 대북 제재 단계적 해제 의사 표명

- 후루야 게이시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2차 북·일 정상회담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내세우며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5.22)

북·일, 국장급 회담에서 납치 문제 재조사 합의

- 북한과 일본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외무성 국장급 회담을 개최하였으며(5.26~28),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는 것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동시 발표(5.29)
 - 일본은 납치피해자 재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대북 독자제재 일부를 해제하고 대북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북한은 포괄적이며 전면적 조사를 진행해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해 약속
 -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치피해자 및 행방불명자, 1945년 전후 사망한 일본인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
 - 또한 특별조사위가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일본 측에 통보하고 일본인 유골처리와 함께 생존자를 일본 측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며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의 면담도 허용하기로 결정
 - 일본은 이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북·일 간 인적왕래 규제 △송금 및 휴대금액을 제한하는 규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입항금지조치 등을 해제하기로 합의

일본 납북자 가족, '재조사 합의'에 기대감

- 일본인 납북자 전면 재조사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일제히 기대감을 표시(5.29)

미국 국무부, 일본의 투명한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지지

- 젠 사키(Jen Psaki)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납북자 문제를 투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5.29)
 - 미국은 이번 합의에 관해 일본으로부터 사전에 통보 받았으며, 일본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
 -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응답

한국, 북한에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호응 촉구

- 한국 정부는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납북자·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인도적인 문제에도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5.30)

북한 송일호 대사, 북·일 협상 상당한 진전 평가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북·일 협상을 마치고 귀국길에서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5.30)
 - 특히,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성실히 노력해 왔으며 일본 정부도 우리의 노력을 인정했다. 해야 할 일은 전부 하겠다”고 언급

북한 송일호 대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계획 언급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교도통신과의 평양발 인터뷰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전면 재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내부 조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으나, 조사위원회의 발족 시기나 조사 기간에 관해서는 비공개(5.30)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일본에 조직, 구성, 책임자를 통보하게 돼 있다고 설명(6.17)
 - 일본 정부는 북한이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 측 책임자를 만나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일본, 납북자 조사 검증 직원파견 검토

-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와 관련, 필요에 따라 외무성, 경찰청 직원 등을 북한에 파견해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5.31, 6.1)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언론에서 북한에 정부 요원 파견 의향을 표명

아베 총리 방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전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아베 신조 총리의 방북도 검토하겠다고 답변(6.3)
 - 다만, 아베 총리의 구체적인 방북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언급
 -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유럽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북 전망을 질문받자 “지금 판단하는 것은 경솔하다”며 신중한 입장 표명
- 후루야 게이지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일본 언론에서 아베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6.11)
 - 그러나 아베 총리의 발언 시점이나 장소 등 구체적 언급은 자제
- 후루야 게이지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정상회담은 막판에, 끝에 가서 하는 것이고 모든 납치피해자가 귀국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총리 방북의) 대전제”라며 모든 납북 일본인들이 귀국해야 아베 신조 총리의 방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6.17)

- 이어 북한이 이번 주 내로 납치 문제 해결 관련 모든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락을 주기로 했으며 “현 단계에서 조직·구성·책임자 등과 관련해 어떤 연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곧 통지가 올 것”이라고 전달
-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 방북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우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6.24)
 - 또한, 조치 후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견지에서 자신의 향후 행보를 고려하겠다고 설명

일본 관방장관, 특정실종자 명단 북한에 전달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방송에서 6월 8일에 특정실종자 명단도 포함된 명단을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고 설명(6.11)
 - * 특정실종자란 일본 정부가 납북된 것으로 의심하는 실종자 470명으로, 이는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 17명과는 별개로 일본 민간단체 ‘특정실종자 문제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북·일, 베이징에서 국장급 협의 예정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북한과 일본이 7월 1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여 북한으로부터 납치 문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조직, 구성, 책임자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6.25)
 - 일본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북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할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적정한지에 대해 확인한 뒤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
 - 북한이 6월 29일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일본은 예정된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다고 설명(6.29)

3. 국군포로

귀환국군용사회,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 개최

- 귀환국군용사회는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군포로들에 대한 북한 포로수용소에서의 감시와 통제, 사회적 차별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심각한 북한인권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전달(4.23)

6·25 국군포로가족회, 유해 보상·전사일자 정정 요구

- 6·25 국군포로가족회는 6·25 참전 국군포로 명예회복촉구집회를 열고 국군포로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도 하지 않는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국군포로 유해에 대한 보상과 전사일자 정정을 요구(6.16)
 - 북한에서 전사한 국군포로도 참전유공자와 동일한 대우를 요구했으며, 전사일자를 6·25가 아닌 북한에서 사망한 날짜로 고치라고 촉구

국방부, '북한 사망 국군포로' 유해송환 비용 지급 추진

- 국방부는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해를 유가족이 국내로 송환했을 경우 국방부 장관이 유가족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요된 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6.18)
 - 개정안은 '국군포로 유해' 및 '유해송환' 개념, 유해에 대한 유전자 검사, 유가족 유해송환에 대한 지원, 유해 재반출 제한 등에 관한 규정 포함

4. 이산가족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및 북측의 거부

- 한국 정부는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고 이에 앞서 이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을 1월 1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1.6)
 - 이번 제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데 따른 것
 -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의 분리 입장도 재확인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는 남한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연계하는 기존 입장을 거듭 표명(1.9)
-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거부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시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연례적 군사훈련 등을 인도적 사안과 연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 연계 반대입장 재확인(1.9)
 - 김의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 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주의 사안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자세 거듭 촉구(1.10)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및 남측의 수용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에 통지문을 보내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전격 제의(1.24)
 - 통지문은 “상봉 행사는 이미 북남 적십자단체들이 합의하였던 대로 금강산에서 진행하되 날씨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설이 지나 날씨가 좀 풀린 다음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

-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북한의 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구체적인 시기 제의
 - 통일부는 북한이 설 이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전격 제의해온 데 대해 “북측이 뒤늦게나마 우리의 제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표명(1.24)
 - 북한에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2월 17~22일 금강산에서 갖고 이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월 29일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1.27)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

- 남북은 통일각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2월 20~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2.5)
 - 2013년 추석 상봉 행사 추진 당시 합의하지 못했던 우리 상봉단의 숙소 문제는 한국 정부가 요구한 대로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로 확정됐으며, 상봉자 규모는 남북 쌍방 각 100명으로 하되 지난해 9월 추석 상봉 추진 때 교환한 명단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하기로 합의
 - 우리 측은 이날 접촉에서 상봉예정일 직전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무산된 작년 추석 상봉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북측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통일부가 전달
 - 또한,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뒤 다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해외 반응

-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산가족 상봉 날짜를 확정한 남북한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지지를 표명(2.5)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한이 오는 2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2.7)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 명단 확정

- 남북은 2013년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 당시의 상봉단 명단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상봉단 명단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교환(2.6)
 - 남측 대상자는 지난해 명단에서 11명이 빠진 85명이며, 북측 대상자는 지난해 명단에서 5명이 빠진 95명
 - 북측 상봉자 1명의 남측 가족이 개인적 사정으로 상봉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북측 상봉단은 94명으로 조정(2.7)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 3개항 합의

- 남북은 판문점에서 재개된 고위급 접촉에서 기존 합의대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3개항에 합의(2.14)
 - 남북 고위급 접촉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고위급 접촉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계속 협의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
 - 당초 북한은 지난 12일 고위급 접촉에서 키 리졸브 연습을 이산가족 상봉 행사 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으나, 북측은 이날 우리 측의 계속된 설득에 기존 입장에서 후퇴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 남북 이산가족 상봉 1, 2차 행사 개최(2.20~22, 2.23~25)
 - 1차 행사에서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80명과 동반가족 56명, 북측 가족 174명이 상봉
 - 2차 행사에서는 남측 가족 357명이 북측 가족 88명과 상봉

박근혜 대통령,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의

- 박근혜 대통령은 제95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흩어진 가족을 만나는 게 더

이상 특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당국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공식 제안(3.1)

- 또한,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교환과 화상상봉에 대해 북측과 협의할 것을 당국에 지시(3.4)

통일부,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

- 통일부는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협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3월 12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3.5)

북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거부

- 북한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우리 측 제의를 거부(3.6)
 - 북한은 “현 남북관계로 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

한국, 북한에 “적십자 실무접촉 호응 촉구” 통지문 발송

- 정부는 대한적십자 명의의 통지문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정치·군사적 상황의 연계를 경계하며 북측이 남측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3.7)
 - 또한 “지난 2·5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이후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북측이 우리 측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

미국 하원의원, 재미 이산가족상봉촉구결의안 제출

-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하원의원 4명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이산가족상봉촉구결의안(Encouraging reunion of divided Korean American families)을 제출(3.8)
 - 민주당의 찰스 랭글(Charles Rangel), 존 코니어스(John Conyers) 의원과 공화당의 샘 존슨(Samuel Johnson), 하워드 코블(Howard Coble) 의원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 북한에 거주하는 친지들 간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

박근혜 대통령,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재차 제안

-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3.28)
 - 박 대통령은 제안 중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 분야에 있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재차 제안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 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표명

북한, 재미 한인에 가족 유골 반출 허용

- 북한이 이례적으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박문재 박사의 누나 박경재 씨의 유골 반출을 허용(5.15)
 - 박문재 박사는 10년 넘게 의료 봉사를 하며 인연을 맺은 북한 당국자들에게 2014년 초 누나 유골의 일부라도 미국으로 옮기고 싶다는 소망을 조심스럽게 전달
 - 북한은 5월 3일 방북한 박문재 박사에게 유골 반출을 허가해 주었고, 박 박사는 북한에 사는 누나의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절반가량의 누나의 유골을 얻어 북한에서 미국으로 반출

재미 이산가족, 유엔 북한대표에 서한

- ‘전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는 미국 뉴욕의 유엔 북한대표부 자성남 대사 앞으로

- 보낸 편지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상봉을 위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요청(6·25)
- 전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북한 대표부에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행동촉구 서한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설명

5. 분석 및 평가

탈북민 단속 지속

- 중국 및 태국 등 제3국 내 탈북민 단속 및 체포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련 단체들이 구출활동 및 강제송환금지 촉구
 - 동남아국가 등 주요 입국경로에서 단속이 지속
 - 사건발생 시 관련 단체들이 신속하게 언론에 제보하면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

탈북민 범죄사건 처벌

- 국내 입국 탈북민들이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
 -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강력범죄(마약밀매, 성폭행 등)에 가담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구조화할 가능성 유발
 - 투자금을 모집하여 해외로 도주하는 등 경제범죄의 경우에도 피해규모 확대
 -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재판 받는 사례들에서 범죄입증을 둘러싼 증거수집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부각되어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
 - 입국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

일본인 납북자 회담 진전

-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회담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관련국의 관심과 우려가 제기

- 과거사 및 지역 내 영토분쟁을 둘러싼 관련국의 갈등 속에서 일본이 북·일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
- 6자회담 당사국인 일본이 북한과의 회담을 투명하게 추진하여 북·일회담이 6자회담의 진전과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남북사 문제 해결 노력을 계기로 대북 제재 해제, 지원 재개,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 등이 전망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

- 2013년 남북 간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북측의 요청으로 연기되었다가 2014년 2월 성사되어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재개
 -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 근원적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제안
 - 상봉 행사 이후 추가 실무접촉에 합의하였으나, 북한이 '상봉 행사 이후 사상교육 및 가족선물 회수' 등 방송내용을 이유로 거부
 - 금강산관광 재개 등과 연계하고자 하는 의도 등으로 진전이 미미

재미교포 이산가족 해결노력 강화

- 미국 의회에서도 재미교포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촉구하는 관련 법안이 상정, 하원에서 의결
 - 북한의 반출 허용으로 이산가족의 유골 부분 송환도 성사



제9권 1호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NORTH KOREAN HUMAN RIGHTS